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조은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29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2. 19.

발 의 자 : 조은희 · 박정하 · 신성범
김용태 · 강명구 · 서천호
김미애 · 김장겸 · 서지영
김예지 · 신동욱 · 서범수
박성훈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확산 방지 등 재난관리를 위하여 영업 정지, 시설 폐쇄, 공사중지·정지, 시설 사용금지·제한 등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처분이나 명령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, 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앞으로는 기후변화·신종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각종 재난의 발생 빈도 및 강도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,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, 그에 따른 손실을 입은 자도 더욱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.

이에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과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2항 신설).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부터 제4항을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(생략) <u><신설></u>	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 <u>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.</u>
<u>②</u> ~ <u>④</u> (생략)	<u>③</u> ~ <u>⑤</u> (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)